

러-북 군사협력 규탄 결집... '트럼프 2기' 안전장치 마련

尹 대통령, 중남미 순방 마쳐

美·日·中 등 주요국 정상과 회담
시진핑 방한 예정 등 中 관계개선
미-중 갈등 속 '국익' 좌표 외교
尹 제안 '한미일 사무소' 설치 결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의 제1세

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

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됐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

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초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연 기자 syj@metroseoul.co.kr

알리·테무, 책임회피 등 '불공정약관 가득'

공정위, 13개 유형 47개 조항 시정
개인정보 사실상 무제한 수집 포함

중국의 e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민사소송제기 금지, 재판받을 권리 포기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총 13개 유형 4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두 플랫폼 사업자 이용약관을 들여다 본 이유는 최근 해외직구 매가 크게 증가하며 위해물품 유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아졌고 거래규모도 3.3조원으로 미국(1.9조원)을 크게 따돌린 상태다. 중국계 e커머스 국내 사용자는 현재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알리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G마켓(528만명)을 크게 앞지른 상태다.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된 조항은 알리는 16개, 테무는 31개였다.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천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관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직구 물품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항이 다수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알리 이용약관을 보면, '플랫폼 이용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이트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후속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종류의 책임 또는 피해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테무 이용약관도 '당사는 테무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

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신속 관할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고,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공정위가 지목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소비자나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기로 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 처분 권리를 명시하며,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테무는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난 5월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라울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IMF, 올해 한국 성장률전망 0.3%p 내려

1개월 전 제시 2.5%→2.2% 조정
韓 달러 환율시장 구두개입에 반감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개월 전에 제시한 2.5% 대비 0.3%포인트(p) 내렸다. IMF는 또 이달 중순 단행된 우리 정부의 원·달러 환율시장 구두개입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달 한국을 찾은 'IMF 연례회의 미션단'은 보름가량 이어진 2024년 연례회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앞서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라울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수요 회복의 약세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봤다. 내수 부진 등에 따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IMF는 지난 7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p 올려 잡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까지도 이를 유지했으나 이번 연례회의를 거치며 지난 4월에 제시한 2.3%보다도 낮은

2.2%까지 낮췄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2.0%로, 지난 10월(2.2%) 대비 0.2%p 하향했다. IMF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국 통화 절상 또는 절하 시도와는 별개로, 개입 자체를 문제삼은 대목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환율시장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IMF는 한국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